

韓경제 대외거래 비중 전년比 1.5%p ↓

'2014년 산업연관표' … 33.6%로 총공급·총수요에서 수출입 비중 각각 0.8%p, 0.7%p 감소

수출입 부진으로 우리 경제에서 대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4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제화와 서비스의 총 공급(총수요)은 423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0.7%(30조8000억원) 증가했다.

산업연관표는 1년간 국가 경제에서 발생한 제화·서비스의 생산과 처분 내역을 기록한 통계표다.

국내산출은 전년(3503조5000억원) 보다 1.72%(60조6000억원) 늘어난 3564조1000억원, 국내수요는 전년(3492조3000억원) 대비 1.56%(53조7000억원) 증가한 3486조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입은 4.23%(29조8000억원) 줄어든 673조7000억원, 수출은 2.95%(22조9000억원) 감소한 75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총공급·총수요에서 수출입의 비중은 각각 0.8%포인트, 0.7%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에서 대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33.6%로 나타났다.

원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낮아진 영향으로 원화 기준 수출입물가가 대폭 하락한 영향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배럴당 두바이유 가격은 2013년 105.3 달러에서 2014년 96.6 달러로, 원·달러 환율은 1095원에서 1053.2원



농협법 개정 반대

NH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조합원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호선제 반대·관치농협 반대·축산특례 존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으로 낮아졌다.

수출률은 조립기기제품이 2.3%포인트 하락하면서 전년 대비 1.1%포인트 낮아진 20.7%로 집계됐다.

수입률도 농림수산품(-1.2%포인트), 광산품(-0.2%포인트), 공산품(-0.7%포인트) 등의 수입률이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전년 대비 0.9%포인트 낮아진 15.4%를 기록했다.

2014년 중 산업별(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처리업, 건설업, 서비스업) 구성을 보

면, 제조업의 산출비중이 48.5%로 가장 커다. 서비스업(40.9%)과 건설업(5.5%)이 뒤를 이었다.

제조업의 산출비중은 2011년부터 4년째 하락세다. 2010년 49.0%에서 2011년 50.1%로 상승했지만 2012년 50.4%로 줄었다가 2013년에는 49.4%

에 그쳤다.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서비스업이 59.6%를 기록했다. 뛰어난 제조업(30.2%), 건설업(5.0%) 순으로 나타났다.

국산화율과 부가가치율(총부업액 대비 부가가치액)은 모두 상승했다.

국산화율은 제조업(68.1%)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1.6%포인트 높아진 74.9%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율은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한 38.0%로 나타났다. 산업별 부가가치율을 보면, 광업(-0.5%포인트)

을 제외한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처리업(5.1%포인트), 농림어업(1.4%포인트), 건설업(1.0%포인트) 등이 모두 증가했다. /인천수 기자

우리 증시 MSCI 선진지수 편입 3대 쟁점은?

외국인 ID 제도 개선·원화의 환전성·한국거래소 시세정보 사용권 허용

한국 증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 국 명단에 빠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MSCI는 15일 오전에 발표한 연례 국가 리뷰에서 한국이 내년까지 관찰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MSCI에 따르면 한국이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최대 쟁점은 ▲외국인 ID 제도 개선·▲원화의 환전성(24시간 거래시장 개설)·▲한국거래소 시세정보 사용권 허용 등 3가지다.

이번 리뷰에서 MSCI는 금융위가 제

시한 방안들이 내년까지 발효되기 어렵다면 한국을 관찰대상국에 올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원화 환전성 부족에 따른 투자 제한이 여전하고 한국거래소 시세정보 사용과 관련된 제한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로서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고개를 마시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MSCI 측을 만나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방안 등의 계획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1월 외국인 ID 제도 개선을 위해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선진지수 편입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5월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통합계좌·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첫 번째 쟁점은 차질 없이 진행하는 의지다.

다만 원화의 환전성과 '거래소 시세정보 사용권'은 여전히 쟁점거리다. 정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수출입 비중이 높은 경제특성상 외환시장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우리 외환관련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외 외환거래 허용은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거래소의 시세정보 활용은 당시자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고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천수 기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꽂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5월 수출입물가 동반 상승 전환

전달대비 수출·수입 물가지수 각각 2.4%·3.5% 증가

지난달 수출입물가가 원화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모두 올랐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6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전달(78.59) 대비 2.4% 증가한 80.45(2010년 100 기준)를 기록, 석달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다.

8년7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던 수입물가지수도 77.43으로 전달(74.84) 대비 3.5% 늘었다.

수출입물가가 상향된 것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영향이 커다. 원·달러 평균 환율은 4월 1147.51 원에서 5월 1171.51원으로 2.1% 올랐다.

김민수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장은 "수출물가지수는 대부분 원·달러 환율이 상승의 효과로 증가했다"며 "수입물가지수도 환율의 영향이 크지만, 수출물가

지수보다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수입물가지수가 더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배럴당 월평균 두바이유가는 4월 38.99 달러에서 5월 44.26달러로 13.5% 상승했다.

수출물가지수 상품별로는 농림수산물과 공산품이 각각 전달보다 2.2%, 2.4% 올랐다.

수입물가지수의 경우 원재료가 천연가스 등 광산품(7.8%)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6.9% 올랐고, 중간재도 석탄 및 석유제품(9.3%) 등을 중심으로 2.9% 늘었다. 자본재 및 소비재는 각각 1.6%, 1.7%씩 상승했다.

한편 환율의 영향을 뺀 계약통화를 기준으로 한 수출물가는 전달 대비 0.3% 올랐다. 수입물가도 1.4% 늘어나면서 넉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인천수 기자

금감원, 금융회사 신용정보 관리실태 전수 조사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객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의무를 대폭 강화했지만 관련 시장을 충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은행(58개), 저축은행(79개), 보험사(56개), 증권사(45개) 및 카드사(8개) 등 400여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고객 동의부터 보관 폐기 까지 작년 이후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의무를 시행을 살핀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 제도'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이 본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 고객의 신용정보가 모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수집 및 관리체계 등을 점검한다.

또 올해 4분기에는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부업자(500개)와 벤사(17개), 전자금융업자(77개)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벌인다. 고객관리 프로그램, 업무용 PC 및 업무통제에 대한 관련 항목을 충족 및 관리 의무를 시행을 살핀다. /인천수 기자

최근 5년간 322억원 규모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

최근 5년간(2011~2015년) 322억원 규모 모바일상품권이 소비자에게 환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모바일상품권 미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모바일상품권을 일정기간 내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간만

료 금액은 719억원에 달한다. 이중 45%는 소비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

주요 모바일상품권 업체별 환급률을 보면 카카오가 88.52%(미환급액 37억원)로 가장 높았다.

반면 KT엠하우스 25.79%(3억원), SK플래닛 19.47%(32억원), 원큐브마케팅 18.77%(3억원), CJE&M 18.18%(1억원), SPC클리어드 11.58%(3억원) 등에 그쳤다. /인천수 기자